

진정한 한국적 창조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부처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발부터 정치적으로 끔찍한 홍역을 치렀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정말 난처하다. 과학기술계가 국정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기대하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라는 ICT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법조계 출신 인수위원장의 횡당한 실언(失言)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화려한 말잔치를 경계해야

창조경제의 바람이 거세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창조형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선진 기술을 베끼는 모방형 경제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넓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틈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과 창업을 지향하는 창조형 혁신이 구호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창조형 혁신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다. 과학기술의 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는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적 창조경제의 실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화려한 수사(修辭)를 앞세운 거품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녹색 기술로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적 성장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화려한 구호를 앞세웠다가 국제기구 유치로 막을 내린 공허한 ‘녹색경제’ 모델의 가슴 아픈 실패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기초과학이 중심이다

이스라엘을 창조형 혁신으로 성공한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창조형 혁신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2천년이 넘는 유대인의 창업 전통을 이어받은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의 세계화와 창업 정신을 흡내 낼 수는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벤치마킹’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글_이덕환
본지 편집인
duckhwan@sogang.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화학과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을 흉내 내는 것으로는 진정한 '창조'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진짜 원동력을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현대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말 특별한 국가다. 75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하임 바이츠만은 발효 공정을 이용한 아세톤 생산과 합성고무 개발을 주도했던 당대 최고 수준의 전문 화학자였다.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형 혁신은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열정을 바탕으로 실현된 것이다. 90세의 이스라엘 대통령이 생명, 우주, 바다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스라엘의 창조형 혁신은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과학지식 증진을 위한 노력에서 얻어진 작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는 과학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고질적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우리 정부의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가 도를 넘어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의 폐해는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초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과학기술의 전주기를 관리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야말로 '빈껍데기'로 전락해버렸다. 창조경제의 출발점인 대학의 기초연구와 산학협력은 대학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 수단으로 변해버렸다. 창조경제의 종착역인 기술의 산업화도 통상 업무까지 떠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몫으로 빼앗겨 버렸다. 인수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놓지 않겠다는 관료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결과다.

부처 사이의 높은 벽을 허물고, 정부의 정책을 창조력이 극대화된 민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 경험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고질적인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부추기는 풍토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의 진원지인 법조계와 부처 이기주의에 중독된 관료 출신을 우대하는 인사로는 창조경제의 성

공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창조적 발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성과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지 않고,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뾰족한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도 심각하고, 복지도 턱없이 모자란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획기적인 혁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형편이 반세기 전처럼 암울한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의 빈곤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탄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과학 대신 산업화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했던 아쉬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해외에서 성공한 우리 동포를 애써 외면할 이유는 없다. 세계화 시대에 이중국적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성과와 우리 사회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이방인'까지 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마치 점령군처럼 군림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연봉만 챙긴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홀쩍 떠나버린 서남표 총장이나 조국을 '선택의 대상'으로 착각하면서 공연히 우리 정치를 비웃고 떠나버린 김종훈 내정자에게 연연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진짜 '한국적 창조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적 자세는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ST**